

사라진 설 대목...우울한 전통시장

차례상 간소화·온라인 구매에 말바우·양동시장 등 발길 한산
상인들 “2~3년전보다 매출 40% 감소...장사 접어야하나” 고민

21일 오전 11시에 찾은 광주시 서구 서부농수산물시장은 설 연휴 ‘대목’ 장사를 하는 시장 풍경과 거리가 멀었다. 예년 같으면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주문과 제수용 과일 구입 등을 놓고 상인과 손님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던 곳이지만, 시장 안팎엔 어두운 얼굴의 상인들만 보일 뿐 손님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 곳에서 15년 간 과일을 판매했다는 김송희(70) 할머니는 “내가 과일장사만 40년을 했는데, 이번 명절처럼 손님이 없기는 처음”이라며 “일반손님은 말할 것도 없고, 소매상들도 ‘설 경기가 죽어 대량구매 하기가 겁이 난다’며 소량구매만 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서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양동시장 역시 사정은 같았다.

건어물 판매상인 김순자(여·64)씨는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했지만, 평소는 물론이고 설 명절이 다가와도 손님이 없다”면서 “가족들과 함께 장사를 그만 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광주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울상을 짓고 있다.

21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지역 주요

전통시장과 농수산물직판장에서 만난 상인 대부분은 “‘설 대목’은 이제 옛말”이라고 했다.

오래된 경기집체로 전통시장의 주 고객인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 지는데다 차례상 간소화,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이 겹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유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올 설 대목장사는 그 어느 해보다 유독 매출하락이 심하다는 게 시장 상인들의 말이다. 과일 등의 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체감 하락 폭은 한층 심각하다.

농수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사과 10개 기준 소매가격은 2만 원으로 지난해 가격(2만5800원) 대비 13%나 내렸다. 다른 과일과 축산류 등의 가격도 전년 설 대비 10~30%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다.

상인들은 “과일가격이 바닥인데도, 그나마 찾아온 손님들마저 가격이 비싸다는 말만 하고 발길을 돌리기 일쑤”라면서 “2~3년 전보다 40% 정도 매출이 줄어든 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말바우시장에서 20년째 과일장사를 하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21일 오전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은 과일을 사려는 일부 시민을 제외하곤 손님이 적어 한산하기만 하다.

고 있는 ‘은영이 아빠 청과물’의 이종화(53)씨는 “일단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꼭 필요한 물품만 사서 가는 분위기”라면서 “예전처럼 명절에 과일을 선물하는 분위기도 사라졌다. 다들 (경기가) 어려워 선물할 여유가 없다며 과일만 만지다 그냥 간다”고 푸념했다.

이씨는 “작년 설 때만 해도 이정도는 아

니었는데, 지난해 추석부터 매출이 점점 줄더니 이번 설엔 지난해 설 대비 반토막이 났다”면서 “설 대목을 위해 신선한 제품을 많이 구입해 놔오니, 남은 명절 기간만이라도 손님이 많이 오셨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박창순 말바우시장 상인회장은 “재래시장의 주고객인 서민의 소비심리가 얼어붙

어 명절인데도 쉽게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면서 “말바우 시장의 경우 집체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차장 증설·도로확장, 문화거리 조성 등 고객 유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갓 낳은 딸 텃밭에 버린

20대 지적장애 엄마

갓 낳은 딸을 버리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21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텃밭에 버린 A(27)씨를 영아 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텃밭에 자신이 출산한 딸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형질에 쌓인 채 버려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다. 텃밭과 태반이 달린 채 버려진 아이는 바로 인근 에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다.

아이를 감싸고 있는 형질이 옷을 만드느라 천의 일부분을 파악한 경찰은 주변 불제공장을 수소문해 이곳에서 일하는 A씨가 아이를 유기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A씨는 이날 자신이 일하는 공장의 화장실에서 혼자 딸을 낳은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결혼을 하지 않고 무직의 남성과 동거중인 A씨에게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동보호기관과 협의해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613명 정규직 길 열렸다

법원,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

“임금 차액 등 250억원 지급”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 및 지연해금 25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승휘)는 “강모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파견기간 2년을 넘긴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으며 회사 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모씨 등 34명이 별도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과 199명이 낸 고

용의 의사표시 청구 등 소송, 46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광주공장 과속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를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근무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강씨 등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아 근무했고 회사 측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파견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조 공정에서 맡은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고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

행을 지휘·명령해 근로자 파견이 맞다고 인정했다.

또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원고들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지연손해금 25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7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호타이어측은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의 판결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향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해 향후 항소 절차 등을 통해 법적인 최종 판단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른 우려와는 별개로, 현재의 위기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정당” 담양군 1·2심 모두 승소

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고법판사 김무신 김용하 김동완)는 “A씨 등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 메타세쿼이아 길 2.1km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기준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았고 2015년부터는 2000원으로 인상했다.

A씨 등은 무료로 다니던 가로수길의 차

량 통행을 제한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인당 도로 통행료를 부담하게 받는 셈이라며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시설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가로수길은 일반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고 행정재산”이라며 “공공용 재산인 가로수길과 메타랜드 내 시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것인지 담양군이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동료 흥기로 찌르고 도주한 베트남인 5일만에 검거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흥기로 찌르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광주일보 2020년 1월 17일 6면) 닷새 만에 붙잡혔다.

광주광안경찰은 21일 금전문제로 동료 베트남인을 흥기로 찌르고 달아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26)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밤 11시 10분께 광주시 광안구 한 거리에서 동료 베트남인 B(23)씨의 엉덩이를 흥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원룸에서 동거중인 B씨가 보증을 질반을 내지 않자며 독촉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대구와 경북 등지로 도망다닌 것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동차 기어 조작 실수로 앞뒤 차량을 들이받은 60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행.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65)씨는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뒤 차

전교조 대법원 앞 결의대회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 정권 때 저지른 ‘사법거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패한 지 꼭 4년째 되는 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를 진행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쳐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차량 기어 조작 실수로...신호대기 중 앞뒤 차량 “황황”



○...자동차 기어 조작 실수로 앞뒤 차량을 들이받은 60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행.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65)씨는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뒤 차

량을 충격하고 연이어 앞에 있던 차량마저 들이받았다는 것.

○...이 사고로 충돌한 차량들이 밀리면서 시내버스 등 5대가 연쇄 충돌하고 8명이 다쳤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갑작스러운 기습 통종 때문에 순간 기어조작을 실수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